

 보건복지부	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20. 7. 12. / (총 13매)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	팀 장 담 당 자	정 혜 은 김 우 람	전 화	044-202-3575 044-202-3804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기획총괄팀	과 장 담 당 자	김 성 훈 이 승 훈		044-200-2293 044-200-2295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과 장 담 당 자	이 종 호 조 승 래		044-200-5740 044-200-574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외국인 선원 임시생활시설 운영계획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외국인 선원 임시생활시설 운영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방문판매업체와 관련한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 당국과 각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하여 방역 관리에 힘써 달라고 당부하였다.
- 또한 최근 선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였는데, 이와 관련해 혹시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해양수산부에 주문하였다.

- 아울러 코로나19 외에도 폐스트 등 다른 감염병이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만약을 위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국내 유입 등 리스크 요인을 검토하고 사전에 대비해달라고 중앙방역대책 본부에 지시하였다.

1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6월 28일(일)부터 7월 11일(토)까지 최근 2주간을 살펴보면,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31.7명으로 이전 2주간(6.14.~6.27.)의 28.8명에 비해 2.9명 증가하였으나,
 - 수도권의 1일 평균 환자 수는 15.0명으로 이전 2주간(6.14.~6.27.)의 22.1명에 비해 7.1명 감소하였다.
 - 지역적으로는 대전·충청, 광주·전남 등을 중심으로 감염 전파가 이뤄짐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의 1일 평균 환자 수는 이전 2주간(6.14.~6.27.)의 6.7명에 비해 16.7명으로 증가하였다.
- 집단감염 건수는 7건으로 이전 2주간(6.14.~6.27.)의 19건에 비해 12건 감소하였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의 비율과 방역망 내 환자 관리 비율은 이전 2주간과 거의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다.
 - 전파 양상에 있어서는 대규모 다중이용시설보다는 소모임, 종교 시설, 방문판매업체 등에서 작은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 최근 2주간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6월 14일 ~ 6월 27일		6월 28일 ~ 7월 11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28.8명	⇒	31.7명
수도권	22.1명		15.0명
해외유입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	14.3명		19.7명
집단 발생 ¹⁾ (신규 기준)	19건		7건
감염 경로 불명 비율	9.5% (57/603)		9.4% (68/720)
방역망 내 관리 비율 ²⁾	80% 미만		80% 미만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불명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해외유입 환자는 지난 2주간 1일 평균 19.7명이 발생하였으며, 그 전 2주(6.14.~6.27.)에 비해 5.4명이 증가하여 전 세계적인 유행 확산에 따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다만 해외입국자는 모두 2주간의 격리와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해외유입 환자는 검역 또는 격리 과정에서 발견되어 이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 위험성은 거의 없다.
- 따라서, 코로나19 유행 위험도를 평가할 때에는 국내 발생과 해외 유입을 구분하여야 하며, 국내 발생에 대한 평가에 따라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수위도 결정하게 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코로나19 유행 확산을 억제하며 집단감염 사례가 줄어든 것은 긍정적이나, 수도권을 제외한 대전, 광주 등 지역에서 여전히 환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며,
 - 사회적 거리 두기의 단계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며, 고위험 시설 점검과 역학조사 등의 방역 관리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설명하였다.

2 수도권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5월 28일)에 따른 수도권 주민 이동량 변동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휴대폰 이동량, △카드매출 자료,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이용량을 분석하였다.

< 수도권 주민 이동량 분석을 위한 활용 자료 >

활용정보	정보항목	보유기관	비고
휴대폰 이동량	인구 이동 건수	S이동 통신사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카드매출 자료	소비 금액	S카드사	S카드사 가맹점 매출액으로 전체 카드매출액 추정, 다만 보험/통신/홈쇼핑/온라인 업종 등은 제외
대중교통 이용량	수도권 교통 이용	서울시· 인천사경기도	T사에서 정산한 수도권 내 버스(카드·현금), 지하철(도시철도 포함), 택시(현금 제외) 이용현황

- 분석 결과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 이후 여섯 번째로 맞이한 주말(7월 4일~7월 5일)의 수도권 주민 이동량은 직전 주말(6월 27일~6월 28일)보다 약 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하기 전 주말(5월 23일~5월 24일) 대비 약 102%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 ① (휴대폰 이동량) 수도권 휴대폰 이동량은 직전 주말(6월 27일~6월 28일) 대비 0.3% 감소(9.6만 건 감소)하였고,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이후 6주간 총 4.5% 증가하였다.

* 비수도권은 4.0% 감소(직전 주말 대비 151.7만 건 감소)

< 주말(토·일) 휴대폰 이동량 >



② (카드 매출) 수도권 카드 매출은 직전 주말(6월 27일~6월 28일) 대비 변동이 없으며,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이후 6주간 총 3.8% 하락 (△518억 원)하였다.

* 비수도권은 0.01% 증가(직전 주말 대비 1억 원 증가)

< 주말(토·일) 카드 매출액 >



- ③ (수도권 교통이용) 수도권 버스·지하철·택시 주말 이용 건수는 직전 주말(6월 27일~6월 28일) 대비 0.6% 감소(13.4만 건 감소)*하였고,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이후 6주간 총 3.9% 증가(82.9만 건 증가) 하였다.

* 버스 0.3%(4만 건 감소), 지하철 0.7%(5.7만 건 감소), 택시 1.8%(3.7만 건 감소)

< 수도권 버스·지하철·택시 주말(토·일) 이용 건수 >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수도권 이동량 분석 결과 방역 강화 조치 이후에도 수도권 주민의 생활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다.
- 수도권 지역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수도권 주민들께서는 경각심을 갖고 △외출·모임 자제, △다중 이용시설 방문 지양, △사람 간 거리 두기 준수 등 일상생활 속에서 방역 당국의 요청을 철저하게 이행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3 해외입국자 관리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해외유입 환자 증가에 대응하여, 개방성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확진자의 해외유입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 정부는 지난 6월 23일부터 코로나19 감염 위험도 평가를 통해 방역 강화 대상 국가를 지정하여 비자와 항공편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해 왔다.

- 또한 E-9(비전문취업)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는 자가격리 확인서를 입국 전 발급받도록 하고, 격리장소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여, 이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입국을 차단하였다.

○ 항만 검역도 개선하여, 하선자에 대한 전수 진단검사와 격리 조치를 실시하고, 승선검역을 강화하였다.

○ 7월 9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들어오는 정기 항공편의 좌석점유율을 60% 이하로 운항하고, 방역강화 대상 국가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를 제한*하는 조치도 시행하였으며,

* (예외 사유) 필수적 기업·취재·학술 활동 및 인도적 사유

- 7월 13일부터는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 재외공관이 지정한 해당국 검사·의료기관에서 발급

- 이외에도 해외유입 환자 수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급증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국가의 부정기 항공편도 감편 조치할 계획이다.

4 외국인 선원 임시생활시설 운영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로부터 외국인 선원 임시생활시설 운영 계획을 보고받았다.
- 지난 7월 1일 발표한 항만방역 관리 강화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선원은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간 의무적으로 시설격리해야 한다.
 - 임시생활시설이 확보된 2개 권역(부산·여수)*을 7월 13일부터 우선 개소하고, 추후 시설 확보에 따라 추가 개소할 예정이다.
 - * (부산권) 부산, 마산, 울산, 포항, 동해 등 강원도·경상도 항만입국자 대상
(여수권) 인천, 평택, 대산, 군산, 여수, 목포 등 서·남해역 항만입국자 대상
 - 항만으로 입국한 외국인 선원은 모두 시설격리가 원칙이나, 항공기 혹은 선박을 통한 출국일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선사나 대리점에서 마련한 별도 차량으로 외부접촉 없이 공항 혹은 항만으로 바로 이동한다는 조건에 따라 중도 퇴소를 허용할 예정이다.
- 시설 규모가 제한적인 점을 고려하여 사전예약제를 통해 운영할 예정으로, 국내 항만에서 외국인 선원 하선을 희망하는 선사 혹은 대리점은 절차에 따라 사전신청하여야 한다.
- 시설격리 의무 혹은 시설운영 지침을 위반한 선사 혹은 대리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고, 외국인 선원 임시생활시설 이용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부과할 예정이다.
- 시설 운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선주협회, 선박관리산업협회 등을 통해 공지하였으며,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5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7월 11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내체육시설 109개소, ▲유원시설 105개소 등 40개 분야 총 11,216개소를 점검하였다.
 - 점검 결과 마스크 미착용, 거리 두기 미흡 등 1,321건에 대해 현장 지도하였다.
 - 인천에서는 실내체육시설 43개소 등 979개소를 점검하여, 마스크 미착용 등 9건을 행정지도하였으며,
 - 경북에서는 유원시설 13개소 등 105개소를 점검하여, 놀이기구 이용제한 등 14건을 행정지도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251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146개반, 581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286개소가 영업 중지임을 확인하였고, 영업 중인 1,965개소에 대해서는 전자출입명부 설치, 방역수칙 준수 안내 등을 지도하였다.

6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7월 11일(토)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8,428명이고, 이 중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6,977명,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1,451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443명이 감소하였다.
- 어제(7.11.)는 약국 방문을 위해 무단이탈한 2명을 확인하여 각각 계도 조치하거나 고발할 예정이다.
- 아울러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3개소 2,772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171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 (7.11.) 입소 303명, 병원이송 1명, 퇴소 197명, 의료진 등 근무 인력 355명

< 붙임 > 감염병 보도준칙

- < 홍보자료 별첨 >
1.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
 2.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
 3.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
 4.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5. <일반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6.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7.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8. 마스크 착용법
 9.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붙임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사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의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땀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